

# 2013년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새누리당 **국회의원 류성길 (대구 동구갑)**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607호 T. 02)784-3852 / F. 02)788-0269 / E. yoo575@hanmail.net

보도일시	2012. 10. 17.(목)~	담당자	박 소 희 비서
------	-------------------	-----	----------

## ▶ 지방재정 안정화 대책 필요

국고보조사업 확대 필수로 재정부담 가중! 취득세 인하 항구적 대책 필요

## ▶ 세부담 기준 모호한 2013년 세법개정안

매년 경제 정책마다 바뀌는 기준! 기준을 정할 필요 있다

2008년 세계개편안(과세표준), 2012년 세계개편안(재형저축기준), 2013년 4.1 부동산 대책(생애최초 주택구입대상), 2013년 세계개편안(소득세 추가 부담기준) 모두 제각각

OECD기준, 가처분소득 중위값은 약 4,250만원(월 354만원) 수준이고 ±50%를 적용하면 약 2,125만원~6,375만원 수준이 증산중

## ▶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보고서’

‘조세감면 예고제’와 ‘세수실명제’ 도입을 포함하는 보고서 제출 제도화하자

한 달 만에 중장기 조세부담률 전망 1% 하향 조정하는 것은 문제, 모자이크식 세법개정에서 벗어나 전면적 세계개편 논의 시작되어야 한다.

## ▶ 지난 정권 ‘부자감세’ 는 없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는 소득세 최고구간(부자)의 세율을 낮췄지만 「이명박 정부」는 3% 추가 부담시켰다

아당은 감세정책 철회하고 공약을 이행하라지만, 정작 참여정부가 공약한 ‘무상보육’(공약집 196p)도 2012년에야 시작했고, ‘장애인연금제도 도입’도(공약집 210p) 2010년 7월에 시행돼, 실업계 및 농어촌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공약집 264p)도 2011년 특성하고 실시, 농어촌 고등학교는 아직도 미이행 중

## ▶ 증세, 지금 논(論)할 때 아니다.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과세기반 확충이 먼저다

법인세 인상, 경제 왜곡(근로자, 소비자, 주주, 중소기업에 전개 주목해야 한다

##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확대될수록 지방의 재정 부담 가중

취득세 인하 항구적 대책도 필요하다

##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재정) 전체 지방예산에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38.3%에서 2012년 40.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같은 기간 53.9%에서 51.1% 낮아지는 등 자치단체 예산운영의 자율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
- 2012년말 기준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1.1%로서 2004년(57.2%) 이후 계속 하락 추세에 있으며,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125개에 달함

〈연도별 예산규모 및 재원별 수입(비중)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예산규모	125.0(100)	137.6(100)	139.9(100)	141.1(100)	151.2(100)
자체수입	73.7(58.9)	80.8(58.8)	79.4(56.8)	79.3(56.2)	85.9(56.8)
지방채	3.5(2.8)	3.7(2.7)	5.2(3.7)	3.8(2.7)	4.0(2.6)
의존수입	47.8(38.3)	53.1(38.5)	55.3(39.5)	58.0(41.1)	61.3(40.6)
재정자립도	53.9	53.6	52.2	51.9	51.1

자료 : 안전행정부

- (높은 부채와 중앙정부 의존) 2011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규모는 28.1 조원으로 2007년(18.2조 원) 대비 54.4% 급증했고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07년 16.3%에서 2011년 20%로 연평균 5.6% 증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악화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부채규모 및 채무비율 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증가율
부채규모	18.2	19.0	25.5	28.9	28.1	12.3
채무비율	16.3	16.3	19.5	20.7	20.0	5.6

자료: 안전행정부

○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규모)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당초 예산편성 기준으로 '08년 22.8조원에서 '12년 32.1조원으로 40.8%급증

- 국고보조사업 재원배분 측면에서 총사업비(국고보조금과 지방비의 합)에서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08년 35%에서 '12년 39%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지방비 부담의 연평균 증가율은 13.8%로 지방예산 증가율(4.9%)과 국고보조금 증가율(8.9%)을 상회하는 등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확대될수록 지방의 재정 부담 가중

○ (중앙\_지방정부간 기능 조정) 정부는 중앙정부의 복지 분담률 확대를 위해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10%p 인상,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복지기능과 국가의 책무에 전반에 대한 방향 설정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14년 기준 0.8조원)
- 분권교부세 대상 지방이양사업 중 수요 편중\*으로 일부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15년 기준 0.5조원)
- 아울러, 지방소비세 전환을 단계적 확대 및 지방소득세의 개편 효과가 '15년에 여전히 발생함에 따라 '14년 한시적으로 부족한 재원은 예비비를 통해 지원('14년 1.2조원)

○ (취득세 영구인하) 지난 7월 22일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 전액에 대한 보전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임.

- 정부는 현행 5%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10%로 인상하여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전액 보전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하였음에도 항구적인 보전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강함
- 취득세율 영구적 인하\*(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분: 연간 2.4조원(지방교육세 포함)

\*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기준거래량 88.2만건(취득세 과표가 실거래가로 변경된 '06년부터 '12년까지의 거래량 중 최고('06년) 및 최저('12년)를 제외한 평균치)

〈 취득세율 인하 내역 〉

구 분	~6억원	6~9억원	9억원
현 행	2%		4%
↓			
변 경	1%	2%	3%

- 취득세 영구인하를 위한 관련 법률은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 예정(9월말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중)

○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관련 문제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보다는 관련 예산을 따내는데 집중하고 있고 보조사업자들도 보조금은 '일단 받고 보자'는 그릇된 인식과 관행이 만연하여 '보조금 부풀리기', '목적 외 사용', '무자격자 부당 수령' 등의 문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등 보조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 감독기관의 관리 미흡 및 관련 제도상 허점으로 인해 재정 누수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경북 상주시 : 동일 부지에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06년 환경부예산 53억원, '09년 문체부 예산 145억원 교부받아 혼용 집행
- 서울시 외 12개 시·도에서 '08~'12년 사이에 종료된 504개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581억원을 소관 중앙관서에 미반환 등
- 환경부에서 총사업비 7,833억원의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요조사 없이 47개 시군을 선정할 결과 통합위탁 운영에 동의하지 않은 32개 지자체에서 사업 포기 및 보류
- 문체부에서 사업타당성 및 운영내실화 방안 없이 박물관 확충 위주의 예산 지원으로 경남, 전남 도내 65개소의 공립박물관 중 64개소가 만성적자, 35개소가 전문인력 부족, 소장품 부실임

## □ 정책제언 및 질의

○ 세입면에서 중앙정부의 세입 여건 악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 경기둔화로 인한 세수 감소에 더해, 지출면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 무상급식 등 대규모의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복지관련 지출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질의 1) 지방재정이 처해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 국가세입에서 차지하는 지방세 비율은 2013년 예산 기준으로 19.9%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현재의 재정위기 국면을 타개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질의 2) 지방재정이 대단히 어려움.

국고보조사업 재원배분 측면에서 총사업비(국고보조금과 지방비)에서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연평균 증가율이 13.8%로 지방예산 증가율(4.9%)과 국고보조금 증가율(8.9%)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향후 대응 방안은?

질의 3) 취득세 영구인하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들은 항구적인 보전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음.

9.26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통한 지원 대책은 미흡하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적이며, 자연 증가분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신장효과 1.1조원 또한 정부의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인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향후 대응 방안은?

	지방소비세율	영유아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정부안	5% ⇨ 11% 인상	현재 ⇨ 10%P 추가 인상
지방자치단체 요구	5% ⇨ 16% 인상 (지방재정안정화 일환 5%, 취득세영구감세 보존 6%)	20% 인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합의안)

\*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높은 신장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향후 10년간 추계 시 연평균 1.1조원

○ 지방자치단체는 부채규모 증가('07년 18.2조원→'11년 28.1조원)에도 불구하고 ‘일단 따놓고 보자’는 식의 관성적인 사고로 전체 지방예산에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인 증가('08년 38.3% → '12년 40.6%)하고 있는 실정임.

질의 4) ILO와 OECD 등은 사회보장서비스의 국가최소수준(national social protection floors)을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안은 특히 G20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음(OECD, 2011)

우리의 사회복지와 관련한 기능 및 재원배분과 관련하여 이러한 국가최소수준의 개념을 활용해, 최소기준은 국가 전액 부담하고, 권장수준까지의 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이, 권장수준 이상의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질의 5) 지방재정의 비효율적 운영도 살펴봐야 할 과제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일단 받고 보자’는 그릇된 인식과 관행이 만연하여 ‘보조금 부풀리기’, ‘목적 외 사용’, ‘무자격자 부당 수령’ 등의 문제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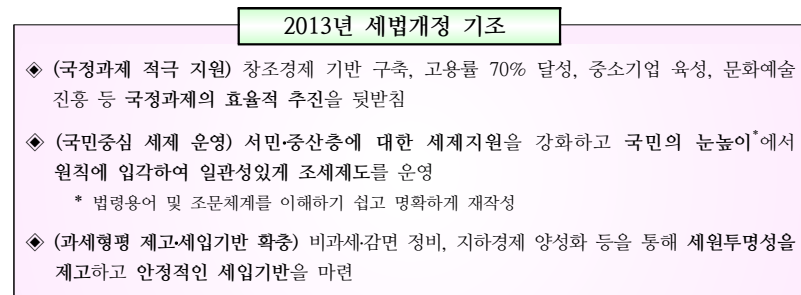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예산이 적절하지 못하게 집행되지 못하도록 예산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향후 대응 방안은?

## 2013년 세법 개정안

- 정부 세부담 기준선 산출근거 모호하다 -

### □ 현황과 문제점

- 2013 세법개정안은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의 틀 내에서 국정과제의 적극적 지원, 국민 중심의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비전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		
기본 방향	국정과제 적극 지원	국민중심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장동력 확충, 중소기업 지원</li> <li>창조경제 기반 구축 (벤처투자 활성화)</li> <li>고용률 70% 달성 지원</li> <li>문화예술 진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세의 사회안전망 강화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li> <li>농어만영세자영업자 지원</li> <li>서민·중산층 지원</li> <li>납세편의 제고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li> <li>비과세·감면 정비</li> <li>과세기반 확대</li> <li>지하경제 양성화</li> </ul>

자료: 기획재정부

- (세법안 수정) 지난 8월 8일 정부는 2013년도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8월 13일 세법개정안 수정 발표하였고, 다시 9월 26일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확정 발표하였음.

- 박근혜 대통령, 8월 10일 “서민경제가 가득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방향과 어긋난다”며 지적

- 당초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는 기준선을 연소득 3,450만원으로 설계 ⇒ 중산층 고려부족 해소를 위해 수정 ⇒ 5,500만원~6,000만원(16만원 추가부담→2만원 추가부담), 6,000만원~7,000만원(16만원 추가부담→3만원 추가부담)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 (세액공제 전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의 경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에 대한 고려 미흡.

- 소득공제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수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지출을 공제 함으로써 납세자들의 부담능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인 반면, 세액공제는 일단 계산(산출)된 세액을 정책적인 관점 등에서 경감 또는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일률적 적용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

- (모호한 중산층 기준) 정부는 중산층이 세부담 경감을 이유로 총급여 3,450~5,500만원 구간은 추가적인 세부담 없이 종전 수준의 세금만 부담하도록 세법개정안을 수정하였음. 그러나 중산층의 세금인상의 기준이 왜 최초에 3,450만원이 되었고, 수정안에서는 왜 5,500만원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중산층 논란 초래

\* OECD기준, 전체 가구 소득 중 가처분 소득 중간값(약 4,250만원)의 ±50%를 중산층이라 정의

- 정부는 지금껏 세 부담 기준선의 선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음

정부 각종 정책에 등장한 세부담 기준선			
구분	금액	기준	비고
2013년 세제개편안	5,500만원	가구연소득(OECD기준)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
2013년 4.1 부동산 대책	6,000만원	부부합산 연소득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행
2012년 국감	8,800만원	과세표준액 기준	부자증세 논란
2012년 세제개편안	5,000만원	근로자 연소득	근로자 재산형성저축 제도입
2008년 세제개편안	8,800만원	과세표준액 기준	감세효과 서민·중산층 43.9% 혜택 집중

(자료: 기획재정부)

○ (야당주장 1, 월급쟁이 세금폭탄) 정부는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법수정안을 제시하고 중산\_서민들의 세 부담을 2~3만원으로 줄이는 합리적인 방안이라 하나, 중산\_서민들의 세 부담은 '천차만별'이라 주장.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월급쟁이의 13번째 월급을 앗아갈 것.

- 정부는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중산서민층 등 취약계층의 세 부담은 감소 주장 \* 세 부담 귀착: ①대기업·고소득자 +2.84조원 ②중산서민층·중소기업 △9,300억원
- 동일 연봉의 직장인이라도 6세 이하 자녀가 많을수록, 노후 대비 연금저축 납입액이 클수록,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이 많을수록 중산층 이상의 세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됨.

연봉 같아도 내년 세 부담은 천차만별		연봉 6000만원 직장인 세금 왜 달라지나		
연봉 6000만원 B씨 6세 초과 자녀 2명,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연금저축 연 200만원 납입, 교육비 200만원, 의료비 100만원	연봉 6000만원 A씨 6세 이하 자녀 3명,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연금저축 연 400만원 납입, 교육비 400만원, 의료비 200만원	다자녀공제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 부담	연금저축 세액공제 전환 영향	
다자녀관련	-15만원	자녀가 모두 만6세 이하	연간납입액	세 부담 증감
교육비	0원	1자녀 0원	100만원	3만원
의료비	0원	2자녀 15만원	200만원	6만원
보험료	3만원	3자녀 40만원	300만원	9만원
연금저축	6만원		400만원	12만원
근로소득공제	11만2500원			
근로세액공제	-13만원			
내년 세 부담	7만7500원 감소			
		자녀가 모두 만6세 초과		
	40만원	1자녀 -15만원		
	0원	2자녀 -15만원		
	0원	3자녀 -5만원		
	3만원			
	12만원			
	11만2500원			
	-13만원			
	53만2500원 증가			

자료: 한국경제신문

○ (야당주장 2, 농민·자영업자·중소기업 쥐어짜기) 야당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30% 설정이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식당 사업자에 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근로 또는 사업 소득 3700만원 이상 농민에 대해 자경 양도세 감면배제·고소득 작물 재배 과세가 실제로는 농민 세 부담 가중시킬 것이라고 분석하며 "농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쥐어짜기 세제"라 주장

-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입기반 확대를 위하여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식당 사업자에 세 부담을 가중시킬(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30% 설정).
- 겉으로는 귀농을 장려하고 규모화와 효율화를 통해 소득증대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농민 세 부담 가중시킬(근로 또는 사업 소득 3700만원 이상 농민에 대해 자경 양도세 감면배제 / 고소득 작물 재배 과세).
- 투자지원제도의 재설계에 대기업에 대한 공제율은 축소(7%→3%)하는 것이 타당함. 하지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현행 7%)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기업과 차이가 미미한 4%와 5%로 인하.

○ (야당 3, 공약 뒤집기) 야당은 기초연금 후퇴와 함께 올해에 일몰이 도래하는 44개 비과세 감면 항목 중에서 단지 14개에 대해서만 폐지하여 대선공약에 어긋남을 주장

- 특히 세수부족대책과 공약이행 소요 재원조달,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계획이 포함되지 않아 나라살림에 대한 우려 확산 초래

## □ 질의 및 답변

○ (세법개정안 수정 관련하여) 지난 8월 8일 2013년도 세법개정안 발표 ⇨ 8월 13일 세법개정안 수정 발표 ⇨ 9월 26일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발표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 초래

질의 1) '세금을 아프지 않게 거위 깃털 뽑기'로 비유하면서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은 국민적 반발을 불러오는 등 정무적으로 미숙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질의 2) 당초 세법개정안과 수정안을 비교해 보면,

세금을 부담하는 총급여 구간이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나, 어떤 근거로 5,500만원으로 결정하였는지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였음. 왜 세 부담의 기준 구간이 5,500만원으로 변경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이처럼 세 부담 경감에 대한 정부의 설명부족은 결국 '중산층 논란'으로 확대되었음. OECD 기준을 적용할 경우 총급여의 중위값은 약 4,250만원(월 354만원) 수준이고 ±50%를 적용하면 대략 2,125만원~6,372만원 수준이 중산층이 됨. 향후 중산층을 위한 정책 입안 시 이 기준이 적용되는 것인지?

질의 4)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를 전환하면서 각 제도에 대한 기본적 취지를 반영하는 것에 소홀한 점이 있음.

특히 교육비(고등학교까지),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공제로 유지하고, 신용카드의 경우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야당의 주장에 대하여) 금년도 세법개정안은 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고, 과세사각 지대를 해소하는 등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를 추구하였으나, 야당은 월급쟁이 세금 폭탄, 농민·자영업자·중소기업 쥐어짜기 개편안이라 비판

질의 5) 정부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비과세·감면을 정비하여 공약재원을 조달해 나갈 계획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음.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비과세·감면의 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인지,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질의 6) 금번 세법개정안으로 대기업·고소득자가 2.84조원 추가부담하고, 중산서민층·중소기업은 9,300억원의 혜택으로 나타나 중산·서민에게 더욱 유리한 세법개정안이라고 정부는 설명. 또한 EITC확대와 CTC(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는 한편, 중소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와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등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따라서 ‘월급쟁이 세금폭탄’, ‘농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쥐어짜기’라는 표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질의 7) 9월 26일 발표된 「2013년 세법개정 정부확정안」에는 ‘중소기업희망 사다리’를 만들기 위한 R&D비용 중견기업 범위 확대(조특령 § 9)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설비투자 감가상각내용연수 단축(법인령 § 28) 및 공장자동화설비 관세한시감면 확대 (관세규칙 § 46)가 제외되어 있음.

수정안 발표 시 포함되었던 내용이 삭제된 것인지, 이와 관련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장기 조세정책의 방향’ 보고서

- ‘조세감면 예고제’와 ‘세수실명제’ 도입 등을 포함해 보고서제출을 제도화 하자 -
- 한 달 만에 중장기 조세부담률 1%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문제 -

## □ 현황과 문제점

- 정부는 지난 8월 8일,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맞춰 국가 재정운용의 근간이 되는 조세정책의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새 정부의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음.

- 조세부담수준의 합리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부담률의 합리적 조정(‘12년 20.2%→’17년 21% 내외)

구 분	한국	일본	싱가폴	홍콩	대만	중국	인도
조세부담률(‘10년, %)	19.3	16.3	13.1	13.9	11.9	18.2	16.5

자료: 기획재정부

- 조세구조의 정상화: 소득소비과세 비중을 높이고, 법인재산과세는 성장 친화적으로 조정  
\* 우리나라의 조세구조는 OECD 평균에 비해 소득세·일반소비세 비중은 낮고, 법인세·재산세 비중은 높은 수준임

- 조세지원의 효율화

- 조세지출제도는 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 및 서민지원 중심으로 재편하고, 일몰도래 제도는 종료하되 필요시 새로운 형태로 재설계
- 조세지출-세출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효과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사후 성과관리를 강화

-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수립의 제도화) 정부는 매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조세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제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 왔으나, 중장기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었음.

지난 8월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세법개정안’과 함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중장기 정책방향의 틀 안에서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의 기초를 다졌다는데 의미를 가지며, 이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틀 안에 이러한 조세정책 방향(계획)도 포함
- 특히, 부담금의 경우 준조세로 사실상 조세정책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으나,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음 (ex. 환경관련 부담금(사실상 환경관련 조세) ‘탄소세 도입논의’)

○ (보다 명확한 방향성 제시) 조세정책방향에 ‘중장기’라는 말이 붙으니 당장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보다 상세한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여러 불확실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수치로 목표를 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정책의 실효성과 연속성을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방향성 제시가 요구됨
- \*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년 단위로 경제, 재정 운용 여건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재정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조세감면일몰 예고제와 세수실명제) 정부는 매년 세법개정을 통해 비과세 감면제도의 정비를 해오고 있으나, 일몰이 도래한 정책에 대해 유독 당해 연도에 반발이 심해 문제가 되고 있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몰대상 사업(정책)을 사전에 예고하는 ‘조세 감면일몰 예고제’ 도입이 필요함. 또한 매년 반복되는 불확실한 세수전망으로 인한 국가재정운용 계획 차질을 막기 위해 세수실명제를 도입하자는 것임.

- 비과세 감면일몰 해제 일자와 사유 등을 매년 ‘세법개정안’ 별표로 첨부
- 세수실명제를 통해 정교한 성장률 예측 문화 정착

○ (증세에 대한 불안) 정부는 조세부담률을 2012년 20.2%→ 2017년 21% 내외로 조정하여 조세부담을 합리화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일부에서 증세를 통한 공약재원 마련 방안의 일부라는 비판에 직면

\*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이 사실상 ‘증세’라는 비판 이후, 9월 26일 세법수정안을 통해 2017년 조세부담률을 20.1%로 하향 조정함

- 박근혜 정부는 참여정부와 달리 세율 인상이나 세목신설을 하지 않고 비과세감면정비와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부담률을 올리겠다는 조세정책의 원칙 강조

\* 역대 정권 중 조세부담률을 21%로 끌어올린 적은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이 유일

## □ 질의 및 답변

○ 정부가 그동안 경제상황을 고려해 해마다 세제개편안을 만들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큰 틀의 조세정책을 수립하지 못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비판을 받아왔음.

질의 1) 세법개정안을 만들기 이전에 중장기적인 조세제도 개편 방향부터 제대로 설정해야, 비로소 일관되고 합리적인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이런 차원에서 이번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평가를 정부의 자체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람.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0년 19.3%, 2012년 20.2% 수준으로 미국(18.3%)·일본(15.9%) 등에 비해서는 높지만, 독일(22.1%)·영국(28.3%)·이탈리아(29.4%)·프랑스(26.3%) 등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임. \* OECD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 24.6%

질의 2) 이번에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보고서에서는 특히 OECD국가 및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조세수준을 주로 설명하고 있는데, 선진국은 대부분 경제성장이 둔화되었기 때문에 과거 경제실적을 그대로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것에 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 3) 정부는 8월 8일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보고서에서는 2017년까지 조세부담률을 21%내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2013년도 세제개편안의 증세 논란 이후 수정 발표한 보고서(9.26)에서는 2017년 20.1%로 조정 발표되었음.

한 달만에 중장기 조세부담률을 1% 수준이나 수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1%의 조세부담률 차이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구체성 보완) 조세정책 방향 보고서에는 중장기적인 조세정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실천계획과 우선순위 등)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함.

질의 4) 일정 부분의 한계는 있겠지만,

향후 5년의 기간에 대해서 성장률, GDP 수준,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세목별 세수 목표, 세수확충 방안(비과세감면 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확충 등으로 분류)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관련 제도의 변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질의 5)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초의 ‘중장기 조세정책의 방향’임에도 신정부 5년의 국정철학에 해당하는 국민행복,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등의 정신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질의 6)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은 종료되는 당해 연도에 들어와 유독 반발이 심함.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의 별표에 일정 기간(3년) 후 종료되는 비과세감면에 대한 일몰예고를 하자는 것임.

또한 매년 경기전망과 세수 전망이 실적치와 달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상실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세수실명제 도입’하는 부분도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질의 7)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과표구간, 세율과 조세감면에 대한 부문까지 함께 고려하여 과세체계를 단순화하는 전면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임.

\* 1996년 4개 소득구간 체계 도입후 2011년까지 16년 동안 실질임금 상승률은 43.7%(명목임금 상승률:108.6%-물가상승률: 64.9%)에 불과

따라서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세법개정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인세·재산세·소비세 등 전면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제언)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등 소위 직접 증세가 아닌 비과세 감면의 정비,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공약 이행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향설정은 옳고 타당한 것임. 과도한 비과세 감면이나 탈루되는 부분을 과세하는 과세기반 확충이 먼저이고, 그래도 세입이 더 필요하다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추가적인 세수확보 방안을 논의해야 함.

지난 정부 부자감세는 없었다

## □ 현황과 문제점

○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상당수 국가들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율을 인상을 통하여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법인세율은 인하함으로써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그러나 새 정부 들어 야당을 중심으로 대기업 법인세율 강화 등 부자감세 철회 주장을 강화해 오고 있는 실정임.

- 야당, 지난 정부에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부여했던 세제혜택을 철회하면 50조원의 세수확보 가능하다고 주장

2008년 이후 OECD 회원국의 세율 변동 현황

구 분	소득세율(최고세율)			법인세율(최고세율)			부가가치세율		
	인하	인상	유지	인하	인상	유지	인하	인상	유지
국가 수	5 (14.7%)	12 (35.3%)	17 (50%)	13 (38.2%)	4 (11.8%)	17 (50%)	0 (0.0%)	17 (51.5%)	16 (48.5%)
세 율 변 동	+0.8%p (‘08, 35.2% → ‘12, 36%)			△0.6%p (‘08, 23.9% → ‘12, 23.3%)			+1.0%p (‘08, 17.7% → ‘12, 18.7%)		

자료: 기획재정부 (2013)

○ (감세정책에 대한 야당의 주장) 야당은 이명박 정부 기간 내내 지속된 부자감세 정책으로 국가재정은 5년간 98.8조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세계적인 경제위기 여파로 근로자들의 삶은 피폐해져만 가는데도 부자들은 고소득을 올리고 계속적으로 부를 증식해 왔음을 주장

- 2008년~2011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명목 GDP 증가율은 26.7%이고, 5인 이상 상용 근로자의 평균 임금 증가율은 12.5%임. 그러나 종합소득 상위 10만 명에 속하는 부자는 34.4%로 전체 GDP 증가율의 1.5배 수준



- 세율인하와 비과세 감면 확대로,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지고, 감세혜택이 재벌대기업에게 집중
  -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 2008년 18.5% ⇨ 2012년 12.9%로 감소
  -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2.9%로 매우 낮은 이유는 비과세 감면 혜택이 주로 재벌 대기업에 집중되었기 때문. 10대 기업 감면율 40.9%, 전체법인의 19.9%보다 2배 이상 높으며, 중소기업 감면율 24.8%보다도 크게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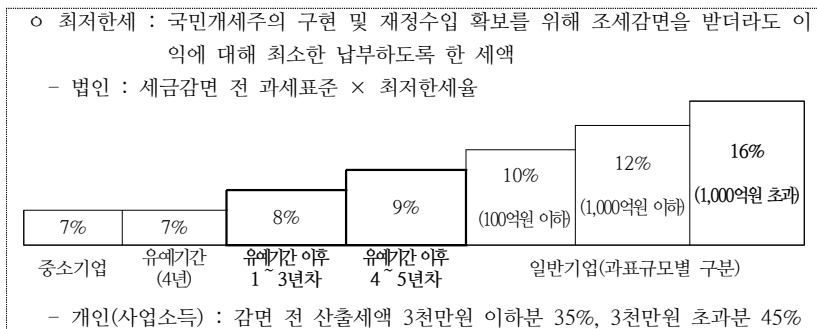
○ (감세정책 철회로 50조원 조달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은 잘못된 것임) 야당은 이명박 정부 감세철회를 통해 5년간 50조원 (연간 10조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내역은 무엇인지?

- 정부는 법인세율, 소득세율을 '07년 수준으로 환원했을 때의 세수효과(연간 9.3조원)로 추정
  - 2008년 법인세율, 소득세율 인하 세수효과: 연간 △12.5조원
  - 2011년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 소득세 최고세율 현행유지 등 감세 일부철회: 연간 +3.2조원

\* 과표 200억원이상 법인세 최고세율(22%)은 현행유지,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위하여 과표 2억원 이상의 중간구간(20%)을 신설

○ (재벌·대기업 최저한 세율 인상) 최저한 세율에서 제외되는 조세감면 항목이 많아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2% 이하에 머물고 있는 만큼,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

- 야당 A의원, 대기업의 최저한세율 인상을 통해 4,800억원의 추가세수 확보 주장 (과표 1,000억원 초과 16→18%, 과표 100억~1,000억원 12→14%)
  - ※ 세수효과 : +4,800억원(높은 세율 1%p당 2,000억원, 낮은세율 1%p당 400억원)



참고

'08~'12년(이명박 정부) 세법개정 내용

	소득세	법인세	기타																			
'08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율 2%p 인하* * 8→6%, 17→16%, 26→25%</li> <li>■ 기본공제 확대 (100→150만원)</li> <li>■ 양도소득세 인하 (종합소득세율과 일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 구간 조정</li> </ul> <table> <tr> <th>종전</th> <th>개정</th> </tr> <tr> <td>과표 1억이하 13%</td> <td>과표 2억이하 11%</td> </tr> <tr> <td>과표 1억 초과 28%</td> <td>과표 2억 초과 22%</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확대 등</li> </ul>	종전	개정	과표 1억이하 13%	과표 2억이하 11%	과표 1억 초과 28%	과표 2억 초과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부동산세 인하</li> </ul> <table> <tr> <th>종전</th> <th>개정</th> </tr> <tr> <td>과표 3억이하 1%</td> <td>과표 6억이하 0.5%</td> </tr> <tr> <td>과표 3~14억 1.5%</td> <td>과표 6~12억 0.75%</td> </tr> <tr> <td>과표 14~94억 2%</td> <td>과표 12~50억 1%</td> </tr> <tr> <td>과표 94억 초과 3%</td> <td>과표 50~94억 1.5%</td> </tr> <tr> <td></td> <td>과표 94억 초과 2%</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가환급금 지급 및 유류세 10% 인하</li> </ul>		종전	개정	과표 3억이하 1%	과표 6억이하 0.5%	과표 3~14억 1.5%	과표 6~12억 0.75%	과표 14~94억 2%	과표 12~50억 1%	과표 94억 초과 3%	과표 50~94억 1.5%		과표 94억 초과 2%
종전	개정																					
과표 1억이하 13%	과표 2억이하 11%																					
과표 1억 초과 28%	과표 2억 초과 22%																					
종전	개정																					
과표 3억이하 1%	과표 6억이하 0.5%																					
과표 3~14억 1.5%	과표 6~12억 0.75%																					
과표 14~94억 2%	과표 12~50억 1%																					
과표 94억 초과 3%	과표 50~94억 1.5%																					
	과표 94억 초과 2%																					
'09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35→33%) 2년 유보</li> <li>■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축소(공제한도: 500→300만원)</li> <li>■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2→20%) 2년 유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세금계산서 대상 확대 * 법인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li> <li>■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과세 전환</li> </ul>																			
'10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일시금에 대한 퇴직 소득공제 축소 (퇴직소득금액의 45→40%)</li> <li>■ 외국인의 채권투자 소득 비과세 폐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시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축소</li> <li>■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 공제 축소 (공제율 투자금액의 20→1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축소</li> <li>■ 택시 LPG 개별소비세 과세 전환</li> </ul>																			
'11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 3억 초과 38% 최고세율 신설</li> <li>■ 소득세 최고세율 8,800만원 초과 35% 유지</li> <li>■ 국내발행 외화표시 채권 과세 전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 중간세율 과세구간 2~200억원 초과 신설</li> </ul> <table> <tr> <th>종전</th> <th>개정</th> </tr> <tr> <td>과표 2억이하 10%</td> <td>과표 2억이하 10%</td> </tr> <tr> <td>과표 2억 초과 22%</td> <td>과표 2~200억 이하 20%</td> </tr> <tr> <td></td> <td>과표 200억 초과 22%</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시투자세액공제 →고용투자세액공제로 축소·전환</li> <li>■ 대기업 최저한세 인상</li> </ul>	종전	개정	과표 2억이하 10%	과표 2억이하 10%	과표 2억 초과 22%	과표 2~200억 이하 20%		과표 200억 초과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도 신설</li> <li>■ 바이오디젤 면세 일몰 종료</li> </ul>											
종전	개정																					
과표 2억이하 10%	과표 2억이하 10%																					
과표 2억 초과 22%	과표 2~200억 이하 20%																					
	과표 200억 초과 22%																					
'12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 인하(4→2천만원)</li> <li>■ 고소득자(세액 3,000만원) 최저한세율인상(35→45%)</li> <li>■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 한도 신설(2천5백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 최저한세 인상</li> </ul> <table> <tr> <th>종전</th> <th>개정</th> </tr> <tr> <td>과표 100억 이하 10%</td> <td>과표 100억 이하 10%</td> </tr> <tr> <td>과표 100~1,000억원 11%</td> <td>과표 100~1,000억원 12%</td> </tr> <tr> <td>과표 1,000억원 14%</td> <td>과표 1,000억원 16%</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및 R&amp;D세액공제 축소</li> </ul>	종전	개정	과표 100억 이하 10%	과표 100억 이하 10%	과표 100~1,000억원 11%	과표 100~1,000억원 12%	과표 1,000억원 14%	과표 1,000억원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확대 및 신고위반자 제재강화</li> <li>■ 성실공익법인 확인제도 신설</li> <li>■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한도 확대(1→10억원)</li> </ul>											
종전	개정																					
과표 100억 이하 10%	과표 100억 이하 10%																					
과표 100~1,000억원 11%	과표 100~1,000억원 12%																					
과표 1,000억원 14%	과표 1,000억원 16%																					
'08~'12년 합계																						

\* 밑줄은 정부안이 아닌 국회에서 의원입법안으로 확정된 내용임

## □ 질의 및 답변

- (부자 감세정책은 없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소득세를 인하 시 서민·중산층에게 저소득 구간의 경감률이 더 커지도록 설계하였음. 특히 최고구간 소득세율(38%)은 유지하고, 3억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인상(38%)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높였음.

〈 정부별 소득세율 인하 내용 비교 〉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MB정부	
	세 율	증감률	세 율	증감률	세 율	증감률
최저구간	10 → 9	△10%	9 → 8	△11%	8 → 6	△25%
중간구간	20 → 18	△10%	18 → 17	△6%	17 → 15	△12%
	30 → 27	△10%	27 → 26	△4%	26 → 24	△8%
최고구간	40 → 36	△10%	36 → 35	△3%	35 → 35	-
					38% 구간 신설	+3%p

- 질의 1) 지난 정권별 소득세 최고구간의 세율 인하 현황을 보면,  
국민의 정부는 40%→36%, 참여정부는 36%→35%, 이명박 정부는 38%구간을 신설하였음.  
앞선 두 정부에서는 소위 부자들을 위해 10%와 3%의 소득세를 감해줬으나, 이명박 정부는 도리어 3%를 추가 부담케 한 것임.  
부총리께서는 이것이 부자감세에 해당한다고 보시는가?  
부자 증세에 해당한다고 보시는가?

- 질의 2) 오바마 정부는 백만장자들의 세부담을 중산층의 실효세율인 30%에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공정과세법(Paying a Fair share Act)’을 논의 중에 있음.  
미국 근로소득세 세율은 높은 반면 투자소득세인 배당·이자·자본이득세 세율은 낮아 상대적으로 불평등하다는 지적인데,  
이것과 비교해 우리는 어떤 상황(조세 형평성)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3) 2000년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도 외국 기업·우수인력 유치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감세기조를 형성하고 있음. 특히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경우 지출축소를 우선하고 있으며,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은 인하하는 추세임.  
2008년에서 2012년까지 OECD국가의 법인세 최고세율 변동현황을 2008년 23.9%에서 2012년 23.3%로 △ 0.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두고 부자감세라는 주장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질의 4)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2008년 18.5%에서 2012년 12.9%로 감소하다는 지적이 있음. 그 사유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0조원 세수확보) 야당에서는 감세정책 철회를 통해 5년간 50조원 세수를 확보하여, 기초연금 등 복지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 지속하고 있으나, 정부의 대응은 미미한 실정임

- 질의 5) 세율인상 여부는 대내외의 경기상황과 국민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  
지난 정권에서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인하하였으니,  
이것을 다시 인상하라는 주장은 고소득자 보다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증가시켜 세부담의 형평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질의 6) 야당에서는 감세정책 철회로 연간 10조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부총리께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언제까지 내놓을 것인가?

- (최저한세율과 실효세율) 야당에서는 일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아 대기업 세부담을 늘리려는 애초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 질의 8) 대기업들이 실제 납부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 질의 9) 최저한 세율과 최고세율의 차이가 지나치게 적을 경우 고용창출, 투자증대, R&D 활성화 등 조세를 통한 정책기능의 실효성이 상실되는 등 조세정책 기능이 무력화될 것임.  
또한 2012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13년부터 최저한 세율을 인상하였는데, 2014년부터 다시금 인상하는 것은 너무 급격한 조치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구분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대만	멕시코
최저한세율(A)	16	20	15	10	16.5
법인세 최고세율(B)	22	39	29	25	28
A/B	72.7	51.3	51.7	40.0	58.9

\* 출처 : 조세연구원

증세! 지금은 논할 때 아니다.

## □ 현황과 문제점

○ 야당을 중심으로 고소득·대기업 등에 대한 증세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기초연금 등 기존 공약을 이행하라는 것이 주된 내용임. 그러나 시기적으로 부적절함

- 야당주장,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또는 최고세율 인상 ▲지난 정부의 감세정책 철회하라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 정부,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 직접적 증세는 경제활력을 저해할 수 있어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음

○ (법인세 인상) 법인세 인상은 2011년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과표 2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은 22%를 유지하고, 과표 2억원~200억원 구간의 법인세율은 20%로 신설 결정하였음.

이것을 야당에서는 인상하자는 것인데, 경기회복과 기업의 해외이전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실제 법인세 인상 효과가 어디로 귀착하느냐 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함.

- 법인세율 변화 \*12년말, 야당은 본회의에서 세율 인상을 위한 법인세법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부결

과세표준	'07년	'08년	'09년	'10~'11년	'12년~
2억원 이하	13 % (과표 1억원 초과)	11%	11%	10%	10%
2억원 초과	25 % (과표 1억원 초과)	25%	22%	22%	20% (과표 2~200억원) 22% (과표 200억원 초과)

현 행		B 의원		C 의원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20	2~500억원	22	2~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	500억원 초과	25	200~1,000억원	22
				1,000억원 초과	30
		* 세수효과 +5.2조원		* 세수효과 +8.9조원	

\* 세수효과는 '12년 신고기준 법인세액을 기초로 추정함

○ (소득세율, 과표구간 조정 등) 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구간 조정(3억원 이상→1.5억원 이상) 또는 45%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 전환,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 금년 세법개정안이 야당의 주장(안) 보다 과세형평성 측면이나 재원조달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함.

- 야당,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3억원 초과)이 1인당 국민소득의 12.6배에 달해 영국 6배, 미국 7.8배에 비해 높은 수준임으로, 과표구간을 낮추거나, 고소득층에 대해 증세를 하자는 것

〈소득세 야당 개정안〉

현행		D 의원 안		E 의원 안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1,200만원이하	6%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4,600만원이하	15%				
8,800만원이하	24%				
3억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	1억5천만원 초과	38%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5%

\* 급여 1억원 이상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축소 포함.  
(민주당안) 1억원~1억5천만원: 3%, 1억5천만원 초과 : 1% (정부안) 1억원 초과 2%

〈세수효과 비교(2011년 귀속, 양도세 제외)〉

구 분		세수효과(억원)	
정부안		8,500	
D 의원안	과표구간	3,200	4,800
	근소공제 축소	1,600	
E 의원안	과표구간	15,600	17,200
	근소공제 축소	1,600	

\* 정부안 1억원초과분 근로소득공제 축소(5%→2%) 효과 : 1,500억원

〈1인당 세부담 변화〉

총급여		1.5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
세 액 (만원)	정부안	+302	+350	+436	+722	+990
	D 의원안	+35	+153	+579	+1,020	+1,780
	E 의원안	+35	+185	+802	+1,624	+5,526

□ 질의 및 답변

○ (중세논란) 야당을 중심으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소득대기업에 대한 중세를 통한 세수확보는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음.

질의 1) 세율인상보다는 비과세·감면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강화 등 세입 기반 확충노력을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중세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 야당에서는 국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2.9%에 불과하며, 외형 최고세율인 22%의 절반 수준으로, 중소기업(12.1%)과 거의 차이가 없음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 주장

질의 2)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008년 18.5%에서 2012년 12.9%로 5.6%포인트나 낮아져 일반 대기업(16.9%)보다 낮은 것은 물론이고, 과표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부과되는 최저한세율(14%)보다도 1.1%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질의 3)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지는 것은 문제가 있음.

S전자는 ‘스마트폰 생산공장’(해외 판매용)을 베트남으로 이전하였음. 이로 인해 해외 생산 비중이 올해 1분기 79.7% 증가한 반면, S전자 소재 지역의 GRDP 감소와 세수기반 상실 정도는 상당하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S전자가 베트남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18% 수준. S전자는 추가로 베트남에 생산시설을 건립할 예정임. 추가 시설이 들어서면 S전자만 4만개, 협력업체 등 포함해 10만개의 일자리가 베트남에 생길 듯

※ 주변국의 법인세율 (지방세 제외)  
홍콩(16.5%), 싱가포르(17%), 대만(17%), 한국(22%), 중국(25%), 일본(25.5%) <기획재정부>

질의 4) 법인세 인상은 경제에 왜곡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용역보고서(‘08.6)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부담 감소는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기업 외에도 소비자, 노동자 등에게 혜택이 전가되고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법인세율 인하의 일반균형 귀착효과

소비자(가격)	종업원(임금)	주주(배당)	사내유보(채투자)
17%	8.5%	15.1%	59.5%

※ 배당성향 20% 가정

<Kryzaniak & Musgrave, 1963>

“법인세 부담은 소비자 가격 상승에 따라 완전히 소비자에게 전방 전가된다”

<Sebold, 1979>

“단기에서도 미국 제조업체에서 법인세 전가가 상당히 크다”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 2013년 10월 16일 세계지식포럼>

“법인세와 소득세는 모두 경제에 왜곡현상을 가져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단계적 중세론 : ‘비과세 · 감면 폐지→탄소세→부가세’ 순이어야 함

○ (야당의 소득세 인상 주장) 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구간 조정(3억원 이상→1.5억원 이상) 또는 45%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주장하고 있음.

질의 5)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및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2013년 세법개정안과 과세형평성과 효과 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6) 고령화에 따른 복지 증대 필요성은 추세적으로 지속될 것이고,

중세 또한 필요할 것이나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중세는 ‘비과세 · 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질의 7) 야당의 주장처럼 1%만이 세금을 (더 과도하게) 내야 한다는 생각은 부적절함.

만약 중세가 필요하다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국민 개세(皆稅)주의에 부합하게 아주 적은 세금이라도 모든 사람이 내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